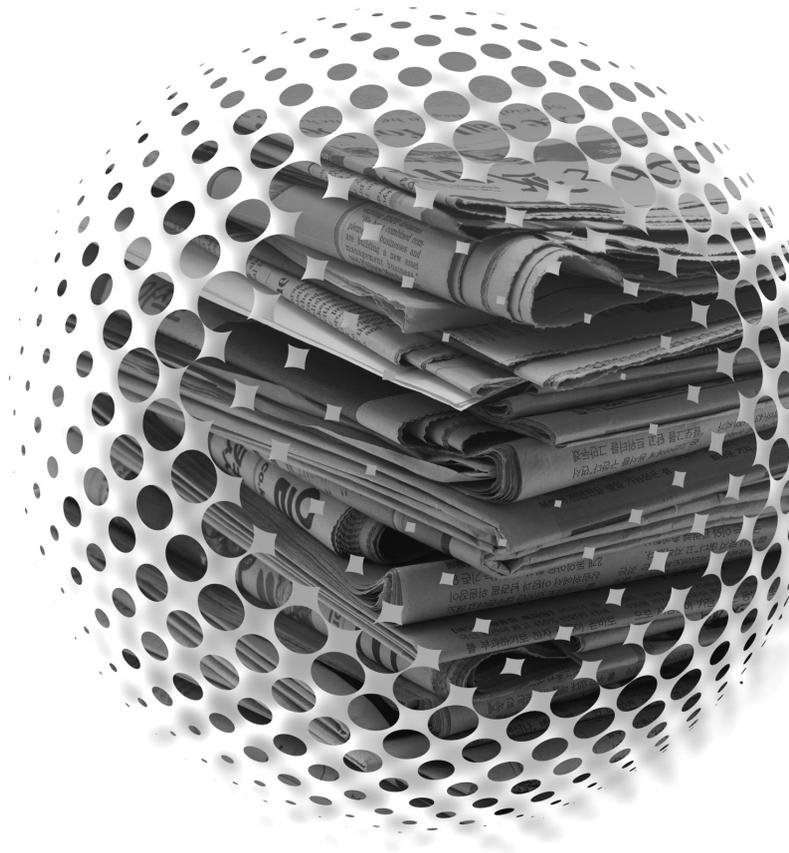


재심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 재심 2013-1 신문윤리강령 위반
전북도민일보 발행인 임 병 찬

〈주문〉

전북도민일보 2013년 2월 4일자 1면 「민주 전당대회 인구보정/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62차 회의(2월 27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이유〉

1. 전북도민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본보 올해 2월 4일자 '민주당 전당대회 인구보정,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 기사와 제목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1) 윤리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인구보정은 논란이 있으나 전국정당을 지향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처럼 '호남 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거나', '호남 당원을 무시한 것'으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리위의 지적에 대해 전북 지역민과 정치권 시각은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선 당세가 약한 지역의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하지, 텃밭이라 할 수 있는 호남을 인위적으로 약화하려 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민주당은 평소 호남을 민주당의 성지라 말하고 호남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총선이나 대선, 혹은 당내 지도부 경선 때만 되면 호남의 힘을 빼야 전국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이중적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게 솔직한 지역의 여론이며, 이런 여론을 가감 없이 반영해 취약지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인구보정 문제는 텃밭인 호남의 영향력을 취대한 줄여야 전국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이번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호남권이 연대해 인구보정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1년 말 이후 민주당은 지도부 선출에 앞서 지역별 인구 보정 방침을 밝혔고, 호남권 선거인단들의 불공정 시비가 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당대표 선관위는 2010년 12월31일 인구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16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인구보정을 했습니다. 인구 1천27만 명의 서울은 국내 전체 인구의 20.2%를 차지하며, 전북은 187만 명으로 3.7%에 해당했으며, 이에 따라서 현장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의 투표 참여에 관계없이 서울은 무조건 인구비율 20.2%와 똑같은 20.2%를, 전북은 3.7%를 선거인단 비율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런 인구보정은 이후 전북 정치권이 지도부 입성 과정에서 힘을 못 쓰게 됐다는 불만이 누증돼 왔던 것입니다.

-본보 2월 4일자 1면 기사는 이런 지역민의 여론과 전북 정치권의 반발 조짐을 언급한 것이며, 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5.4 전당대회에서 인구보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본보 2월 4일자 기사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지, 결코 민주당의 전국정당화를 문제 삼으려 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이의신청하고자 합니다.

2) 윤리위는 또 '기사 작성 시점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민주당 당내 문제를 호남 정치권 전체로 해석한 시각도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민주당 경선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춘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호남 정치권이 이런 기류와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강력히 반발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기사 작성 당시 이춘석 위원장은 "투표가치 보정은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준 호남에 상을 주는 대신 벌을 주는 격"이라며 "인구보정을 강행할 경우 광주 전남 등 호남의 시·도당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당내 문제는 민주당의 핵심 강세지역이랄 수 있는 호남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역 내 여론이 팽배한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전국정당화를 추진하면서도 당세가 강한 호남 정치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 정치권의 정서를 감안하고 민주당 내 호남의 역할과 위상을 염두에 뒀 호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본보 기사가 작성된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윤리위는 민주당 전당대회 인구보정 기사와 관련,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으로 큰 제목을 달고, 이는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목에서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과 총선 공천과정에서 호남 내 기반이 취약한 전북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지역 내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보는 그동안 지역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각종 기획 기사를 통해 접근해왔으며, 지역의 특정 정당 몰표 지원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비판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 민주당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1인1표'의 원칙을 배제하고 당 대표 경선에서 특정 지역, 즉 호남당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민주당의 가야할 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본문에도 없는 자극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일면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전북 정치권이 호남의 불이익을 언급하면서도 전북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력히 우려함에 따라 지역 여론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보 2월 4일자 기사는 민주당의 인구보정 문제에 대해 지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곧 호남의 정서와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전국정당화에 문제를 삼거나 호남으로 확대 분석한 것이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극적인 표현으로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역의 각계 여론과 민심을 반영하려 노력한 것이지 결코 지역주의에 편승해 지역 정치권에 힘을 실어주려 한 것이 아님을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전북도민일보는 위 청구사유에서 문제의 기사는 ‘민주당의 인구보정과 관련해 지역민의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 조짐을 가감 없이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총선이나 대선, 혹은 당내 지도부 경선 때만 되면 호남의 힘을 빼야 전국정당화가 가능하다는 이중적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게 솔직한 지역의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 기사를 심의함에 있어서 민주당의 인구보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민의 여론’ 유무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 기사는 인구보정이 ‘호남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거나’, ‘호남당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윤리위는 기사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2) 전북도민일보는 청구사유에서 윤리위가 ‘기사 작성 시점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민주당 당내 문제를 호남 정치권 전체로 해석한 시각도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사 작성 당시 경선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호남 정치권이 인구보정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시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호남 정치권의 정서를 감안하고, 민주당 내 호남의 역할과 위상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기사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리위는 기사 작성 시점에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 방식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전북도민일보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경선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기사는 ‘정치권은 당원의 지역별, 연령별 투표가치 보정이 당대표 경선에서 호남 정치권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기술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말한 것이다. 이는 선부른 예단이고 추측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5·4 전당대회에서 인구보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윤리위는 위 기사에서 전북도민일보의 주장처럼 ‘호남정치권’ 전체가 민주당의 인구보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

했다. 호남 정치권에는 민주당 외에도 다양한 정당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지역 내 다양한 정당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아예 전북 정치권 전체를 민주당으로 등식화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위 기사가 그러한 오류에 기반을 두고 민주당이라는 한 정당의 인구보정 문제를 호남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기사를 작성한 점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설사 호남정치권=민주당이라는 전북도민일보의 시각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도 그 호남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인구보정 문제에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위 기사는 스스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윤리위는 그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3) 전북도민일보는 청구서에서 문제기사의 큰 제목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인구보정이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이라고 한 것은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과 총선 공천 과정에서 호남 내 기반이 취약한 전북 정치권이 그동안 여러 차례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지역내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민주당 인구보정이 전북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광주 전남지역에서도 전북지역과 유사한 인구보정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전북지역의 문제로 한정해 기사의 제목을 뽑았다. 이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인구보정’ 문제는 민주당내 역학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영향이 전북지역에 한정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 인구보정’을 ‘전북 죽이기’로 표현한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다.

또 제목의 ‘전북 죽이기 악몽 재현?’라는 표현은 본문에도 없는 것으로 독자를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다. 때문에 윤리위는 이러한 표현이 지역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윤리위의 2월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북도민일보의 위 재심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심 2013-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 문〉

서울신문 2013년 6월 11일자 15면 「유엔, 사상 첫 대규모 인력감축」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866차 회의(6월 26일)에서 내린 결정번호 2013-1176호 서울신문에 대한 ‘주의’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서울신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신문윤리위가 지적한 서울신문 6월 11일자 15면 ‘유엔, 사상 첫 대규모 인력 감축’ 기사는 워싱턴 특파원이 아닌, 서울신문 국제부 차장이 직접 작성한 기사입니다. 김미경 국제부 차장은 지난 6년 간 외교부를 출입한 외교안보 전문기자로서, 유엔 관련 소식통들 3명을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특파원이 출장 중이었고, 김 차장은 유엔 사무국(반기문 사무총장 비서실 등)과 주유엔 대표부(김숙 대사 등 관계자),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 등에 취재원들이 있었기에 전화로 이들을 취재했고 이를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에 ‘복수의 유엔 관련 소식통’이라고 출처를 명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가 “현지 특파원이 송고한 것이 아니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엔 관련 취재는 워싱턴 특파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서울신문은 뉴욕에 특파원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엔에 취재원이 있는 내근 기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신문은 자체 심의실에서 국제부 기사들의 출처가 빠지는 것 등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기자들이 출처를 명시하는 것에 다른 어느 언론사들보다 애를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①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2. 위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기자는 취재원이 심층배경 설명을 할 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의 익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되,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③배경설명과 익명조건)

기사에서 취재원의 신분은 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불가피하게 익명 처리를 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또 위 실천요강에서 명시한대로 익명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취재원의 소속기관과 일반적 지위’를 밝혀야 한다.

서울신문의 위 재심 청구 기사는 미국에 있는 특파원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기자가 작성해 국제면에 게재한 기사다. 기사는 “유엔본부가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복수의 유엔 관련 소식통’과 ‘한 소식통’ 등 소속과 지위가 막연한 익명의 취재원을 내세웠다. 익명 처리의 이유는 물론, 취재 경위나 방법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독자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취재원의 신뢰성은 물론 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표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2) 서울신문이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취재원에 대해 ‘뉴욕의 유엔 사무국 소식통’이나 ‘주유엔 대표부 소식통’이라고 명기하고 위 기사 내용을 이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취재했으며 국내에서는 ‘외교부 국제기구국(또는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했음을 밝혔다면 독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오해의 소지도 없었을 것이다.

3) 그러나 서울신문사는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이후 재심 청구를 통해 취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취재방법도 밝혀 왔으며,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볼 때 신문윤리위원회로서는 이같은 소명을 부인할 이유가 없으므로 서울신문의 재심청구를 인용,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